

제205호 (2009. 5. 4)

■ 속보/위기의 건설업

- 중국의 경제 위기 대처 방안과 평가

■ 경제 동향

- 2월 전국 ‘준공후 미분양 주택’ 5만 988호

■ 정책·경영

- 포괄보증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 정보 마당

- 무한장무공해 에너지 ‘풍력’-전세계적으로 큰 성장세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설산업의 화려한 녹색 변신

중국의 경제 위기 대처 방안과 평가

■ 중국의 경제 위기 대처 방안

- 2년간 총 4조 위안(5,860억 달러) 규모의 내수부양책 발표(2008. 11. 9). 중국의 2008년도 GDP가 30조 670억 위안이므로¹⁾ 경기 부양 규모는 GDP 규모의 13.3%로 추정됨.
 - 4조 위안 중 인프라 분야에 45%, 재난 복구 분야에 25%, 농촌 지역의 인프라 및 복지 분야에 9.3%를 투자할 계획임.
- 중국의 경기부양조치는 크게 투자 관련 조치와 소비 관련 조치로 구분해볼 수 있음. 먼저 투자 관련 조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농촌 기초 시설 건설, 주요 기초 시설 건설, 생태 환경 건설, 지진 지구 복구 사업, 구조조정, 증치세 개혁, 신용대출 완화 등임. 대부분이 건설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구성
- 두 번째, 소비 관련 조치는 의료, 위생, 문화교육 사업, 주민 소득 향상 등으로 소비 계층에 대한 투자 및 복지제도와 연관되어 있음.

■ 중국의 경제위기 대처 방안 평가

-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금융 위기의 자국 확산을 막았으며, 막대한 외환 보유액으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음.
- 중국은 2006년부터 시행해온 1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구조 개선을 단계적으로 진행시켜 왔음. 수출 및 투자가 주도했던 성장 패턴을 소비 주도로 바꿔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자원 낭비를 제거하고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 가능한 성장패턴을 만드는 것임. 또한, 노동합동법 제정, 삼농정책, 사회보장체제 등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와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의도함.
 -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 위기로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경기를 부양하고 기존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성장 위주의 경기부양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1) 세계은행은 중국의 GDP는 실제보다 40% 정도 과대 평가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의 경기부양 조치의 주요 내용과 투자 규모>

| 구분 | 조치 | 주요 내용 | 투자 규모 |
|----------------|---|---|-------------------|
| 투자 관련 조치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판자촌 개조, 유목민 주거 안정, 농촌주택 개조 | 2,800억 위안(7.0%) |
| | 농촌기초시설건설 | - 가스와 안전한 식수 제공, 농촌 도로 건설, 전산망 완비, 남수북조 등 대형 수리공장 신축 건설, 대형 댐 개조 | 3,700억 위안(9.3%) |
| | 주요 기초시설 건설 | - 철도, 도로와 공항 등 중대 기초시설 신축 건설 - 중점 : 고속버스 전용차선, 석탄운송수단과 서부간선철로의 건설, 고속도로망 완비, 중서부간선 공항과 지선공항(4C급 이하)을 건설, 도시 전산망 개조 | 18,000억 위안(45.0%) |
| | 생태환경 건설 | - 도시의 수질오염과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 강화 - 중점 : 유역수질오염 예방, 방호림과 천연 임자원 보호, 자원 절약과 배수 감소시설 | 3,500억 위안(8.8%) |
| | 지진지구 복구사업 | - 사천성 대지진 재해지역 복구(중장기 재정지원 재건자금 3,000억원) | 10,000억 위안(25.0%) |
| | 자주창신(自主创新, 자주적 기술혁신)과 구조조정 | - 고기술 산업 건설과 산업 기술 진보 지원 - 서비스업 발전 지원 | 1,600억 위안(4.0%) |
| | 증치세(增值稅, 부가가치세) 개혁 | -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산업에서 부가가치세 유형을 전환하여 기업 기술 개조를 장려 - 기업의 조세 부담 1,230억 위안 경감 기대 | - |
| | 신용대출 완화 | - 금융의 경제 성장 지지력 강화 -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 규모 제한 취소, 신용대출 규모의 합리적 확대 | - |
| 소비 관련 조치 | 의료, 위생, 문화교육 사업 | - 기본 의료 위생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 중서부 농촌 중학교 건물 개조, 중서부 지역 특수교육학교와 향진종합문화센터 건설 추진 | 400억 위안(1.0%) |
| | 주민 소득 향상 | - 2009년 식량 최저 구매 가격과 보조금 인상 - 저소득자 등 사회보험 대상 대우 수준 제고, 도시와 농촌 최저생계 보조금, 퇴직자 양로금, 우대 위문 대상자 보조금 표준 상향 조정 | - |
| 종합 | - 2010년까지 4조 위안 투자(1조 1,800억 위안은 중앙재정으로 충당) - 2009년 4/4분기 중 중앙투자 1,000억 위안, 2009년도 재해지역 지원금 200억 위안 선 집행, 지방 및 사회투자 4,000억 위안 집행 | | |

자료 : '중국 경기부양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양평섭·나수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2009년 경제성장률 8%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
 - 특히 중국 내에서는 내년도 수출에 의한 경제 성장 효과가 '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성장 둔화를 내수(특히 정부투자) 확대에 보완한다는 계획임.
 -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은 수출에 의한 성장기여율이 '0'인 경우 연간 2조 위안이 필요하며, 수출에 의한 성장기여율이 '-3.2'인 경우 연 3조 위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 최근 발표된 일련의 조치 외에도 중국정부는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 준비 중
 - 최근 칭다오시를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가 내수 부양을 위한 10대 조치와 함께 10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진흥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박성민(연구위원-smpark@cerik.re.kr)

2월 전국 ‘준공후 미분양 주택’ 5만 988호

– 전년 동월비 155.6% 증가, 전체 미분양주택은 2개월 연속 감소 –

■ 올 2월 전국 준공후 미분양 주택 수 전월 대비 5.1% 증가해 5만 988호 기록

- 2009년 2월 전국 준공후 미분양 주택 수는 5만 988호로 전월 대비 5.1%(2,454호), 전년 동월 대비 155.6%(3만 1,040호) 증가함.
 - 지역별로는 대구(7,571호), 광주(6,653호)가 전체 준공후 미분양 주택 수의 1/4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각각 전월 대비 6.2%, 12.7%의 증가율을 보임.
 - 부문별로는 공공 부문은 전월 대비 6.1%(25호)가 감소한 반면 민간 부문은 5.2%(2,479호) 증가함.
 - 규모별로는 대부분의 규모에서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음. 특히 85㎡ 초과에서 7.4%(1,371호)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준공후 미분양 주택 현황(2009년 2월말 현재)

(단위 : 호, %)

| 구 분 | 2008.2 | 2009.1 | 2009.2 | | 전월비 | | 전년 동월비 | |
|--------|--------|--------|--------|-------|-------|-------|--------|-------|
| | | | 주택수 | 비중 | 증감량 | 증감률 | 증감량 | 증감률 |
| 합계 | 19,948 | 48,534 | 50,988 | 100.0 | 2,454 | 5.1 | 31,040 | 155.6 |
| 서 울 | 0 | 210 | 227 | 0.4 | 17 | 8.1 | 227 | – |
| 부 산 | 3,131 | 3,598 | 3,556 | 7.0 | –42 | –1.2 | 425 | 13.6 |
| 대 구 | 974 | 7,127 | 7,571 | 14.8 | 444 | 6.2 | 6,597 | 677.3 |
| 인 천 | 0 | 113 | 95 | 0.2 | –18 | –15.9 | 95 | – |
| 광 주 | 1,078 | 5,905 | 6,653 | 13.0 | 748 | 12.7 | 5,575 | 517.2 |
| 대 전 | 391 | 665 | 621 | 1.2 | –44 | –6.6 | 230 | 58.8 |
| 울 산 | 191 | 417 | 407 | 0.8 | –10 | –2.4 | 216 | 113.1 |
| 수도권 | 1,178 | 1,330 | 1,346 | 2.6 | 16 | 1.2 | 168 | 14.3 |
| 지방 | 18,770 | 47,204 | 49,642 | 97.4 | 2,438 | 5.2 | 30,872 | 164.5 |
| 민간부문 | 19,365 | 48,126 | 50,605 | 99.2 | 2,479 | 5.2 | 31,240 | 161.3 |
| 공공부문 | 583 | 408 | 383 | 0.8 | –25 | –6.1 | –200 | –34.3 |
| 60㎡ | 2,499 | 3,899 | 4,015 | 7.9 | 116 | 3.0 | 1,516 | 60.7 |
| 60~85㎡ | 12,115 | 26,196 | 27,163 | 53.3 | 967 | 3.7 | 15,048 | 124.2 |
| 85㎡초과 | 5,334 | 18,439 | 19,810 | 38.9 | 1,371 | 7.4 | 14,476 | 271.4 |

자료 : 국토해양부.

- 전체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2.8%(3,175호)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2%(1,280호) 증가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월 대비 1.5%(362호), 3.1%(2,813호) 감소하였으나, 인천은 지난해 연말 청라지구의 분양 등으로 전월 대비 49.1%(733호) 증가함.

- 부문별로는 공공 부문은 전월 대비 5.7%(50호)가 증가하였으나, 민간 부문은 2.8%(3,225호) 감소함.
- 규모별로는 모든 규모에서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85㎡ 초과에서 전월 대비 3.1%(2,172호)가 줄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미분양 주택 현황(2009년 2월 말 현재)

(단위 : 호, %)

| 구 분 | 2008.2 | 2009.1 | 2009.2 | | 전월비 | | 전년 동월비 | |
|--------|---------|---------|---------|-------|--------|------|--------|-------|
| | | | 주택수 | 비중 | 증감량 | 증감률 | 증감량 | 증감률 |
| 합계 | 109,704 | 114,159 | 110,984 | 100.0 | -3,175 | -2.8 | 1,280 | 1.2 |
| 서울 | 788 | 2,301 | 2,233 | 2.0 | -68 | -3.0 | 1,445 | 183.4 |
| 부산 | 9,053 | 10,284 | 10,207 | 9.2 | -77 | -0.7 | 1,154 | 12.7 |
| 대구 | 14,664 | 14,433 | 13,809 | 12.4 | -624 | -4.3 | -855 | -5.8 |
| 인천 | 1,487 | 1,492 | 2,225 | 2.0 | 733 | 49.1 | 738 | 49.6 |
| 광주 | 6,701 | 6,490 | 6,016 | 5.4 | -474 | -7.3 | -685 | -10.2 |
| 대전 | 2,023 | 3,050 | 3,055 | 2.8 | 5 | 0.2 | 1,032 | 51.0 |
| 울산 | 7,159 | 9,069 | 9,261 | 8.3 | 192 | 2.1 | 2,102 | 29.4 |
| 수도권 | 22,275 | 24,201 | 23,839 | 21.5 | -362 | -1.5 | 1,564 | 7.0 |
| 지방 | 87,429 | 89,958 | 87,145 | 78.5 | -2,813 | -3.1 | -284 | -0.3 |
| 민간부문 | 108,669 | 113,280 | 110,055 | 99.2 | -3,225 | -2.8 | 1,386 | 1.3 |
| 공공부문 | 1,035 | 879 | 929 | 0.8 | 50 | 5.7 | -106 | -10.2 |
| 60㎡ | 2,846 | 2,910 | 2,858 | 2.6 | -52 | -1.8 | 12 | 0.4 |
| 60~85㎡ | 43,984 | 40,723 | 39,772 | 35.8 | -951 | -2.3 | -4,212 | -9.6 |
| 85㎡초과 | 62,874 | 70,526 | 68,354 | 61.6 | -2,172 | -3.1 | 5,480 | 8.7 |

주 : 준공후 미분양 제외. 자료 : 국토해양부

■ 신규주택시장,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돼

- 미분양 주택의 감소에 반하여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이유는 신규주택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임.
 -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대에 이르렀고 일부 지역에서는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기존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에 의하면 2007년 주택보급률은 108.1%, 새로운 산정 방식에 의하면 99.6%임).
 - 또한, 경기 침체의 여파로 주택시장을 자산시장으로 인식하는 시장 참여자가 많아짐에 따라 투자가치와 주거의 질 등을 고려한 신중한 소비자 선택이 대부분임.
 - 따라서, 주택 공급에 있어 과거와 같은 총량적 공급 방식은 소비자의 주택 구매 패턴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미분양이 적체될 가능성이 높음.

엄근용(연구원·kyeom@cerik.re.kr)

포괄보증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 국토해양부는 하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자재 공급자의 자재 대금, 건설기계 임대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을 하나의 보증서로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보증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음.
- 포괄보증제도의 도입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민간공사에서 하도급업자나 자재공급자, 근로자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시공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변제받기 위해 「미캐닉스 리언(mechanic's lien)」을 행사할 수 있음.
- 그러나, 정부 자산에 대해서는 「미캐닉스 리언」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하도급자나 자재공급자, 근로자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대항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공사에 지급보증(payment bond)을 의무화하였음.

■ 포괄보증 도입의 문제점

- 포괄보증(미국식의 지급보증) 도입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채무자인 원도급자가 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재공급자나 2차 하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도급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 상식에 부합되지 않음을 들 수 있음.
- 둘째, 미국에서 원도급자가 2차 하도급자 또는 자재공급자 등에 대한 지급 의무를 지는 지급보증의 주채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도급자가 공사를 마치고 정산할 경우 원도급자에게 부채와 클레임을 완불했다는 선서 각서인 「애퍼데이빗(affidavit)」을 제출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상관행이 존재하지 않음.
 - 미국은 도급 단계별로 대금을 최종적으로 정산을 할 경우 지급각서인 「애퍼데이빗」을 제출하는 관습이 있고, 이를 어기면 위증죄로 처벌됨.
 - 이와 같은 상관습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식의 포괄보증을 도입하면 혼란만 야기하게 될 것임.

- 셋째, 포괄보증은 원도급자가 도산하면 자재공급자 또는 하도급자는 도산한 원도급자와 공모하거나, 2차 하도급자 또는 자재공급자는 하도급자와 공모하여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증기관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 넷째 포괄보증을 의무화하여 대금 지급을 보증하면 보증을 받는 자는 거래 상대방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하여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함.

■ 정책 대안 및 검토

-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첫째, 미국식의 지급보증을 변형한 형태로 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자, 자재공급자 및 건설기계 임대업자만의 하도급대금, 자재대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만을 보증하는 포괄보증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포괄보증제도도 원도급자가 도산하면 자재공급자 또는 하도급자는 도산한 원도급자와 공모하는 유인이 있고, 실제로 자재공급자 및 건설기계 임대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될 수 없어 정책 대안이 될 수 없음.
- 자재공급자 및 건설기계 임대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자재공급자 및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는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 생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자재공급자 및 건설기계 임대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보다 많기 때문임.
- 둘째, 포괄보증보다는 하도급대금, 자재대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보증을 개별적으로 보증하는 것이 보증을 받는 하도급자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보증제도임.
 - 물론, 이 경우에도 자재공급자 및 건설기계 임대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자에게도 개별 보증을 의무화해야 자재공급자와 건설기계 임대업자를 보호한다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될 것임.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

무한정무공해 에너지 ‘풍력’ – 전세계적으로 큰 성장세

■ 지구 환경을 위한 선택 : 녹색에너지

-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무공해 에너지의 생산과 함께 에너지 사용량 저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무공해 에너지(이하 ‘녹색에너지’)에는 태양(태양광/태양열), 풍력, 바이오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지열, 수력, 조력 등이 포함됨.
- 세계적으로 녹색에너지원별 신규 투자 금액은 1,484억 달러(2007년 기준)로, 2006년에 비해 60% 이상 상승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풍력이 43%로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태양과 바이오에너지가 투자 비중이 높은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음.²⁾
 - 투자 범위는 주로 시설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밖에도 기술 개발 등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들 녹색에너지 중 국내에서 태양광과 함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무한정/무공해로 일컬어지는 풍력발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무한정무공해 에너지 : 풍력

- 풍력발전이란 공기의 유동이 가진 운동에너지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자(rotor)를 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 기계적 에너지로 발생하는 유도 전기를 전력 계통이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술임.³⁾
 -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 단가를 살펴보면 풍력이 107.3원/kw로 원자력(34.0원/kw)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지만 다른 에너지(태양광 677.4원/kw)에 비해 싼 편으로, 현재 CO₂ 감축을 위한 저비용·고효율 기술로 인정받아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음. 한편, 풍력발전은 육상, 해상 모두 설치 가능하여 고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2) Global Trends in Sustainable Energy Investment 2008

3) 풍력, 산·재생에너지 RD&D 전략 2030 시리즈 No. 12, p3

■ 국내외 풍력발전 현황 및 성장 전망

- 현재 전 세계적으로 풍력발전 상위 국가들을 살펴보면, 주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및 중국도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전세계 풍력 발전량은 1990년 2,000MW, 2005년 5만 9,000MW, 2008년 10만MW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글로벌풍력위원회(GWEC)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에 풍력 발전량이 전체 전력 수요의 12%를 차지할 것이며, 향후 10년 동안 매년 약 30% 전후의 성장이 기대됨.
- 우리나라의 경우 삼면이 바다로 풍력 자원도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1990년대 들어서면서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풍력발전시장이 매년 규모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실정임.
 -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77.6MW(2006년 기준)로 중국과 일본에 비해 약 14%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술 수준은 분야별 차이는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한편, 국내 풍력발전은 주로 제주도와 강원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각 지자체별로 민자 유치를 통한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음.
- 정부의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전체 전력 공급의 약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야 하고, 이 중 풍력에 의한 공급이 전체 보급 목표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성패는 풍력발전의 보급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내 풍력발전 시장은 아직 미미하고, 기술력 또한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시스템 및 요소 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축적한다면,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내수시장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김윤주(연구원·yjkim@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 일자 | 기관명 | 주요 내용 |
|-------|-----------|---|
| 4. 27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지원사업 본평가에 김현아 연구위원이 위원으로 참여 지역별(수도권 담당으로 참여) 사업 분과별(건설/SOC) 본 평가 실시 |
| 4. 28 | 국토해양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 '녹색성장 TF' 제1차 회의에 이복남 건설관리연구실장 참여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에 따른 건설/교통분야의 참여 확대 방안 논의 |
| 4. 30 | 국민권익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하여 심규범 연구위원이 서면으로 자문 참여 유료직업소개소 소개료 과다 및 소개업자의 대손발생 관련 해결방안, 일일 임금 지급의 문제점과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자문 |

■ 기타 연구원 활동 현황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산업과 국민경제” 학술세미나 주제 발표 참여
 - 연구원 운영선 기획조정실장은 4.27(월), 부동산분석학회가 주최한 ‘부동산산업과 국민경제’ 학술세미나에 참여해 “부동산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
 - 주요 발표 내용
 - 부동산산업의 시장 규모 : 부가가치 기준으로 최대 규모
 - 부동산산업의 투입 및 수요 구조, 부동산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등
- 과학기술원(KAIST) 주관 사업관리 세미나 주제 발표 참여
 - 연구원 이복남 건설관리연구실장은 4. 29(수), KAIST가 주최한 “Project Management Challenge 2009”세미나에 참여하여 “글로벌 건설시장의 변화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
 - 주요 발표 내용
 - 세계건설시장과 사업관리 변화의 흐름
 - 사업관리(PM) 재인식과 국내현안 및 국내건설업체들의 해외사업관리시스템 현안진단
 - 선진업체의 사업관리시스템 개념 및 해외시장에서의 국내외 접근방식 비교 등
- 초고층사회의 기술변화와 한국경쟁력 국제세미나 주제발표 참여
 - 연구원 이복남 건설관리연구실장은 4.30(목), 한국초고층포럼에서 주최한 “초고층사회의 기술변화와 한국경쟁력 국제세미나”에 참여하여 ‘초고층건설시스템 인프라 역량 수준 진단’을 주제로 발표
 - 건설산업의 변화하는 환경과 기술 수준 및 초고층 건설 시스템의 주요 역량별 수준 진단과 시사점 제시

건설산업의 화려한 녹색 변신

얼마 전 ‘탄소와 폐기물 배출 제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마스다르 도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내용의 강연을 들었다. 전기 구동 대중교통수단과 폐기물 처리 네트워크 등의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최고 수준의 대학을 건립하고, 대부분의 건물은 태양광 시설부터 설치해 그 에너지를 활용한다고 한다. 우리 신도시와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모습이다.

선진국들도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일본은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60% 이상 저감하기 위한 건설 정책을 선보였다. 미국은 배출가스를 포함한 폐기물을 50% 이상 저감하겠다는 국가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공조가 단기적인 경제성과 효율성을 넘어서는 친환경 녹색성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 건설시장은 신성장동력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녹색성장·녹색건설이 새로운 키워드로 대두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 쇼크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신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녹색뉴딜’ 사업을 발표했다.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방향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항구적 변화이다. 따라서, 친환경 건설시장은 산업의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과거의 도로, 항만, 주택 등 전통적 상품에 ‘친환경’이라는 가치가 추가되면서 녹색건설시장이 새롭게 부상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그린 건축물, 녹색 생활공간 등은 건설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기술 개발 통해 르네상스 열어야

전근대적인 산업, 부실시공, 부정부패, 안전사고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점철된 건설산업이 변신의 기회를 맞고 있다. 건설산업은 전체 땅과 물의 20% 이상을 쓰고 있으며 천연자원의 30% 이상을 활용하고 에너지의 40% 이상을 소비하는 산업이다. 이처럼 건설은 자원 다소비 산업이기도 하지만 다른 모든 생산 활동의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이므로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설산업이 변해야만 녹색성장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녹색건설을 지향하는 기술적 수준은 아직 다른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녹색성장에 있어서 건설산업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한다면 국가경제 성장을 선도함은 물론 건설산업 르네상스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산업의 일부 부정적 이미지까지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미운 오리 새끼가 아름다운 백조로 변신하듯 건설산업의 화려한 녹색 변신을 꿈꿔 본다. <서울경제, 2009. 4. 27>

김흥수(원장:infra@cerik.re.kr)